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6-07호 (2026.07.27)

■ 이 슈

(산업)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과
인천시 시사점

■ 주요 산업 현황

(제조) 기계장비산업 시장 동향

■ 국내 정책동향

Cotents

I. 이 슈

(산업)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과 인천시 시사점 1

II. 주요 산업 현황

(제조) 기계장비산업 시장 동향 7

(부록) 주요 산업 경기지표 10

III. 국내 정책동향

(경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1

(금융) 금융위, 취약차주 대상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상품 출시 11

(금융)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재산심사 강화 등 제도 개선 12

(산업) 과기정통부, 「피지컬 AI 핵심 경쟁력 확보 전략」 발표 12

(산업) 산업통상부, EU의 새 철강조치에 대응하는 통상애로 대응반 가동 13

(산업) 국토부,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 마련 13

(산업) AI시대를 위한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로드맵' 마련 14

(산업) 중·대형 자동차, 내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 적용 예정 14

연구진

최태림 인천연구원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센터장

상민경 인천연구원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연구원



산업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과 인천시 시사점



#국가균형발전 #초광역전략 #산업고도화 #수도권

- 지난 6월 산업통상부가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 성장엔진을 발굴하는 「5극3특¹⁾ 성장엔진 전략포럼」을 개최하는 등 정부가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적극적 행보를 보이는 중으로, 인천시는 지역의 특색에 맞는 성장전략 발굴과 함께 수도권으로 묶인 초광역 경제권·생활권의 유기적인 연계 방안을 고민할 필요
- 산업통상부는 ‘5극 3특’ 체제 변환에 따른 초광역권 및 특별자치권역별 성장엔진 희망 수요 산업에 대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성화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6년 6월 10일 광주·전남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5극3특 성장엔진 전략포럼」²⁾을 개최
 - 동 전략포럼에서는 권역별 지방정부가 희망 수요로 제출한 ‘성장엔진 수요 산업’에 대하여 산업연구원이 △지역 산업 여건 △기업 투자계획 △성장 잠재력 △국가산업전략과의 정합성 등을 발표하고 지역별 전문가의 시선에서 분석한 지역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
 - 산업부는 5극 3특 각 권역과의 협의를 거쳐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그에 따른 △재정 △세제 △금융 △인력 △기술 △인프라 △규제특례 등 7종 정책 지원 패키지를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
- 정부는 향후 5년 간(2028~2032)의 발전 계획을 담은 「5극 3특 권역별 발전전략」을 수립·발표하여 국가 산업의 지역별 균형성장을 촉진할 계획³⁾
 - 지난 6월 2일 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성장법’)」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정부의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 마련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
- 금번 추진 전략의 경우 인천시는 서울·경기와 함께 수도권(1극)으로 분류된 상황으로, 인천시가 포함된 수도권의 지속 성장 방향성에 대해 고민할 필요
 - 이에 본 고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과 진행 경과를 살펴보고, 해당 전략에 기반하여 인천시 지역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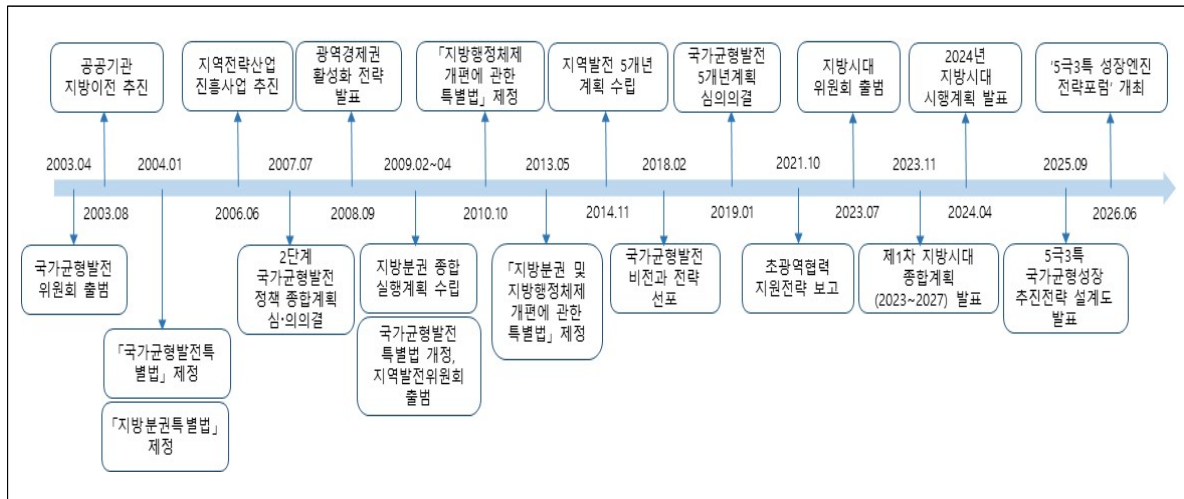
1) 전국을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대경권(대구광역시/경상북도) △동남권(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호남권(광주광역시/전라남도) △강원권(강원특별자치도) △전북권(전북특별자치도) △제주권(제주특별자치도) 등 8개 권역으로 구분.

2) 6/10(수) 서남권(광주·전남), 6/19(금) 제주, 6/23(화) 강원 및 동남권(부산·울산·경남), 6/26(금) 대경권(대구·경북), 6/25(월) 중부권(대전·세종·충북·충남) 및 전북 등 수도권을 제외한 권역을 순회하며 진행. 산업통상부와 산업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각 시도 지자체와 더불어 각 권역별 연구기관·대학·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

3)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 기간이 '28~'32년(5년)으로 결정될 경우 「발전전략」 목표연도를 그에 맞추어 '27~'32년(6년간)으로 작성하는 방안이 검토 중.

-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위축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3년 4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출범한 이후 지속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11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하며 각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토대 마련
 - 국내 지역 균형발전 정책은 2003년 지역 격차 완화 및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⁴⁾’가 출범하고,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으로 인한 국민 생활의 격차를 해소하고, 행정 체계 혁신 및 지방 자치 분권을 통한 지역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을 수행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 촉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 △지역혁신발전계획 수립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으며, 「지방분권특별법」은 지방분권에 관한 지자체의 책무에 관해 명확히 하고 지방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
 - 이후 국내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은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2008) △지방분권 종합 실행계획(2009) △지역발전 5개년 계획(2014)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2018) △초광역협력 지원전략(2021) 등을 거치며 확대·발전
 - ‘광역경제권 활성화전략’은 권역별 핵심 선도산업을 1~2개 선정한 후 해당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는 한편, 산업과 연계된 교통·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력양성을 위한 거점대학을 육성하는 내용을 포함
 -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에서는 지역의 유휴 공공자원을 활용해 지역활력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별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을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주도하는 방향으로 균형발전 정책의 주체가 전환
 - 2023년 7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으며, 같은 해 11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
 -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
 - 위원회는 향후 5년 간의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 공약을 총괄하는 정책 컨트롤타워로, 각 시도가 수립한 계획을 기초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하여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공약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의 정책·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포괄하는 첫 통합계획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①시·도 지방시대 계획 ②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 ③초광역권을 설정한 지자체의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반영한 5개년 중기 계획으로써,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전략으로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등을 선정

4)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①국가균형발전의 기본 방향 및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 ②국가균형발전 관련 지표 개발·관리 ③국가균형발전시책 및 사업의 조사·분석·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행정개혁 △인사개혁 △지방분권 △재정·세제 △전자정부 △기록관리 △혁신분권평가 등 정부 혁신 및 지방분권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심의를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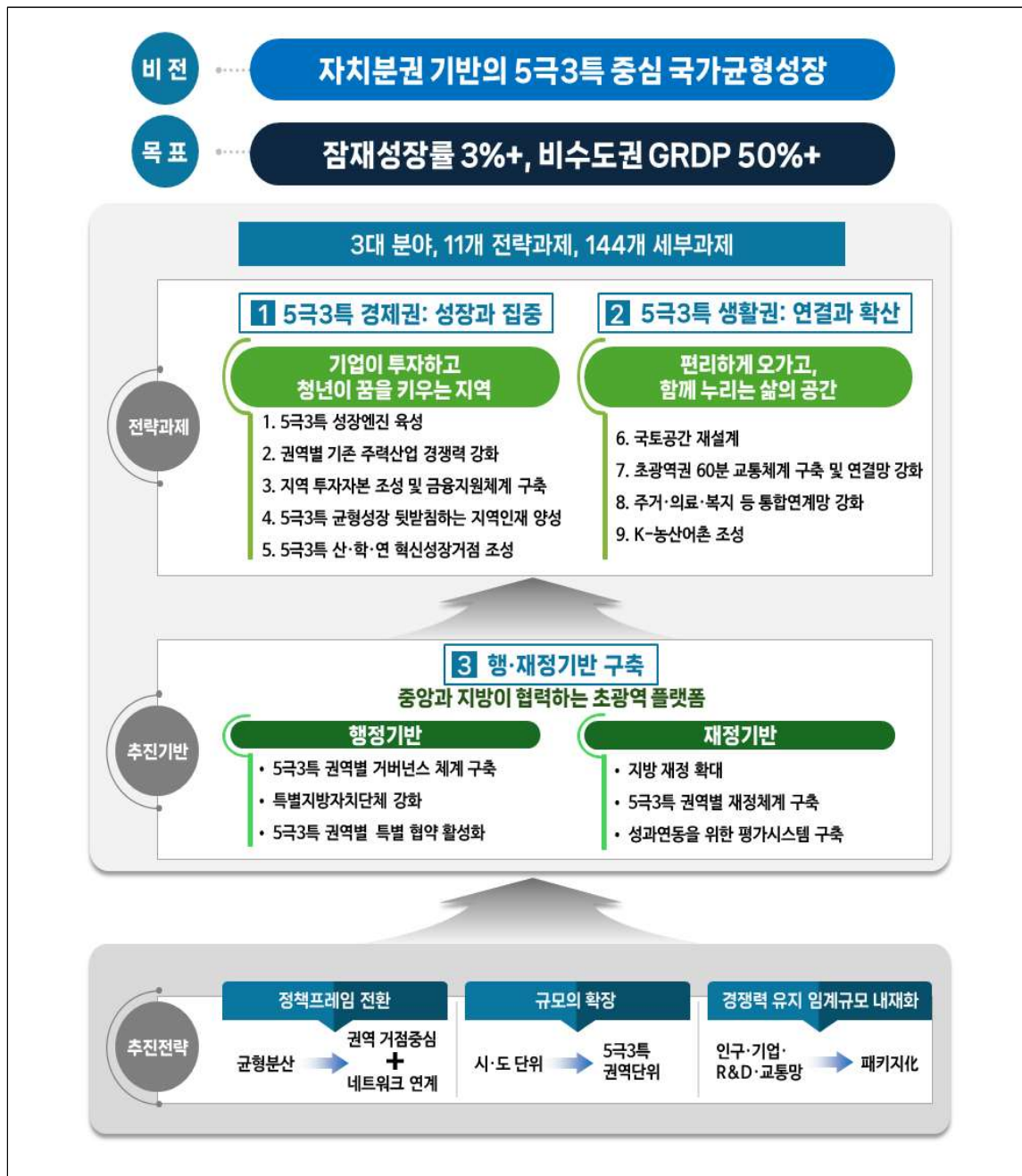


* 자료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및 재구성

〔그림 1〕 지역 균형발전 추진 연혁(2003~2026)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새롭게 마련됨에 따라, 정부는 2025년 9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를 수립·발표하며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종합적 틀을 제시

- 우리나라는 수도권·인구 집중 심화와 지방의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 경쟁력 감소가 국가 전체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중앙부처 주도의 균형발전 전략으로는 불균형성장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한계가 존재
 - 또한 이재명 정부 출범과 더불어 국내 불안정 및 해외 지정학적 분쟁 등 국내외적인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균형성장 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
 - 이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권역별 성장엔진을 장착하고 지역 수요에 기반한 지역자율형 발전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권역별 발전전략의 수립을 추진
-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자치분권 기반의 국가균형성장’에 대한 실천 방안으로, 기존에 부처별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과제들을 △경제권 △생활권 △행·재정 등 3대 분야로 범주화·구체화한 11개 전략과제 및 144개 세부 과제를 포함
 - (경제권) 권역 단위로 경계의 확장을 통해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인재 양성 △산·학·연 혁신거점 조성을 삼각 축으로 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
 - (생활권) 초광역 대중교통망 구축을 중심축으로 주거·교육·의료·문화·관광 등 생활 전반의 통합적 연계를 강화하여 ‘60분 생활권’을 구축하는데 중점
 - (행·재정) 권역 단위 행정 체계 구축 지원 및 제도화, 초광역특별계정·초광역협약·지방우대 지원 강화를 통해 균형성장을 위한 지방우대 기조를 정립하고 5극3특 전략의 효과적 추진을 뒷받침
- 지방시대위원회는 국정기획위원회와의 논의를 통해 균형발전 의제를 5극 3특 전략 틀 안에서 재편·조정함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균형성장 패러다임을 국가 차원의 전략 및 실천방안으로 확립



* 자료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2025.09)

〔그림 2〕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추진 목표 및 전략

-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밑작업으로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공동기획단 구성을 지원하고, 각 권역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한 핵심사업 발굴을 추진 중
 - 각 권역별 공동기획단은 △지원기관 △자문위원 △분야별 분과(경제, 생활, 행·재정) △자문기관으로 구성되며,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 및 정부-권역 간 협의·조정 등의 역할을 담당
 - 권역 공동기획단이 수립한 「권역별 발전전략」에는 2026년 상반기에 발굴한 '2027년도 권역별 대표사업'이 포함되며, 해당 전략은 이재명 정부의 신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사전 기초연구로 활용될 예정

- 권역별 발전전략은 권역별(3특은 지역 내) 거점 중심 및 광역간(3특은 지역 간) 연계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권, 생활권 및 행·재정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5년('27~'31)간의 사업 및 전략과제 도출을 목표
- 공동기획단을 통해 마련된 「권역별 발전전략(안)」은 전략과제 및 추진사업 타당성 등에 대한 총괄작업반의 컨설팅을 거쳐 지역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에 보고될 예정
- 중앙정부의 각 부처 및 기업 지원 유관기관 역시 지역별 미래 먹거리 발굴 및 산업현장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 권역들을 순회·방문하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 중
- 지난 6월 재정경제부는 「5극3특 성장동력 픽앤백(Pick&Back)⁵⁾」을 위해 광주·전남·대구 등 다양한 지역의 산업단지를 방문하였으며, 산업통상부 역시 1월에 진행한 5극 3특 현장 방문에 이어 6월에도 각 권역별 전략포럼을 개최하는 등 실제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 중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5극 3특 지원사업에 특화된 정책자금 지원 성과 종합 지표 개발을 추진 중이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향후 기업지원 사업 전반을 설계할 때 초광역권을 최대한 고려할 예정임을 발표

○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전략 설계도의 '경제권' 분야 사업을 지역산업의 재도약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권역별 여건에 맞는 성장엔진 산업 및 주력산업을 발굴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권역별 발전전략」에 포함하도록 유도

- 설계도의 경제권 분야는 각 권역거점 중심의 지역 성장엔진을 발굴하고 권역별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중점으로 두는 한편, 지역 산업의 성장을 위한 △투자자본 조성 △금융지원 체계 구축 △지역인재 양성 △산·학·연 혁신성장거점 조성 등을 포함
-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은 권역 간 업종 차별화 또는 동일업종 내 세부업종 차별화를 원칙으로 권역별 산업 기반·성장 가능성·기업 투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계획
-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주(모빌리티·에너지) △대구(로봇·바이오) △전북(AI팩토리) △경남(정밀제조) 등 4대 권역에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대규모 AX 연구·실증 거점을 우선 조성하는 한편, 5극3특 별 실증·R&D 지원 및 기술지원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주력산업 고도화 실증테스트베드 구축 지원을 추진
- 또한 중앙·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통해 ①인재양성 ②규제 완화 ③R&D·인프라 등 혁신지원 패키지 ④재정 ⑤펀드 등 '5극3특 성장 5종 세트'를 지원하고, 권역별 투자공사 설립과 정부주도 펀드의 지역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 산업의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할 예정

[표 1] 초광역권별 성장엔진 예시

구분		성장엔진(예시)
동남권	부산·울산·경남	• 자동차, 조선, 우주항공, 석유화학, 철강
서남권	전북·광주·전남	• AI·미래 모빌리티, 재생에너지, 농생명·식품산업
대경권	대구·경북	• 로봇·자동차 부품, 철강, 이차전지, 바이오
중부권	대전·충청	•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기초 R&D
강원·제주권		• 관광, 청정에너지, 바이오

* 자료 : 관계부처합동(2025.08) 참고 및 재구성

5) 5극 3특 지역별 각 산업현장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Pick)하고, 체계적인 지원(Back)까지 연결하기 위한 현장점검.

- 정부의 '5극3특 전략'은 지방과 수도권이 각각 초광역권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국가 성장에 유용한 전략이라는 관점에 기반해 있으므로, 인천시를 포함한 '수도권 발전전략'은 수도권이 글로벌 초광역 지역(Mega-region)과 비교하여 어떤 비교우위를 갖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
 - '초광역 지역'이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이 아닌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 등이 기능적으로 연계된 광역적 공간을 의미하며,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초광역권의 육성을 위해서 △권역 설정의 자율성 △전담기구 운영 △지자체 간 연합기구 운영 △중앙정부의 기능·재원 일부 이양 등을 시행
 - 영국의 경우 지자체 연합⁶⁾ 및 분권협약⁷⁾에 기반한 초광역권을 구축하여 2022년 기준 10개의 지자체 연합이 운영 중으로, 각 지자체 연합은 △평생교육 △숙련·고용 지원 △교통 △토지·주택 △공공서비스 △재정 등을 포함해 정부 부처에서 이양받은 기능을 수행
 - 교토부·오사카부·나라현·돗토리현 등 일본 간사이 지역의 12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간사이 광역연합'은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이 △방재 △관광·문화·스포츠 진흥 △산업진흥 △의료 △환경보전 등 분야에서 이임한 광역처리 사무를 담당하여 교통·물류·의료 인프라를 공유하는 등 광역 차원의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
 - '수도권 초광역 계획'의 수립·추진은 국가 차원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다른 초광역권과의 상호 연계를 통한 권역별 역할의 상호보완성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비수도권 권역과 마찬가지로 수도권의 광역권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적인 재정·제도적 지원의 병행이 요구
 - 초광역 계획 수립을 통해 수도권이 직면하고 있는 △첨단산업 분야 초고도화 △한류 기반의 문화 역량 활용 △수도권 내 생활권의 연결 및 기능 분담 △글로벌 도시로서의 경쟁우위 확보 등 주요 이슈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의 마련이 중요
 - 특히, 인천광역시에는 △수도권 관문 도시로서의 위상 강화 △첨단산업 도시 인프라 구축 △중심 거점에서 떨어져 있는 도서 및 접경지역 활성화 △광역 및 생활권 내 교통 인프라 개선 등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 및 관련 부처의 지원 필요성을 수도권 초광역 계획 포함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추진할 필요
 - 효과적인 수도권 초광역 사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해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지자체 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나, 현재로서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간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 향후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간의 다양한 수준의 논의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도권에 적합한 협의 체계를 구축하는 기본적인 논의 절차 진행 필요

6)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행정경계를 넘어 협력하고 집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정기구로, 정부 행정명령에 의해 설립. 행정명령에 따라 이양된 법정기능 및 지자체 간 합의한 기능 등을 수행. 운영과 관련한 별도의 정부 예산 지원은 없으나, 2017년부터 해당 지역에서 징수한 기업세의 75%를 지자체 연합에 이양하여 재정 자율성을 보장.

7) 중앙정부가 수행하던 정책 및 기능과 관련한 권한, 예산, 의무 등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약으로, 주요 목표는 지역의 경제성장 및 균형, 공공서비스 개혁, 지역 책임성 강화 등.

제조 > 기계장비산업 시장 동향⁸⁾

#제조장비 #산업기계 #정밀기계 #에너지기계 #기계부품

○ 2026년 5월 기준 국내 기계장비산업 수주액은 전년동월대비 25.8% 증가, 전월대비 8.6% 감소한 78,994억 원으로, 2026년도 들어 지난해 대비 총수주액이 증가하는 추세

- 기계장비산업 총수주액은 국내외 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지난 2025년 11월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5월 기준 2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보이며 수주가 확대
- 5월 수주액은 △전기기계(98.6%) △특수산업용기계(40.2%) △일반산업용기계(7.6%) 등 수주 금액 비중이 높은 부문뿐만 아니라 △의료·정밀측정 제어기기(72.0%) △사무자동화처리기계(13.7%) 등 대다수의 부문에서 수주액이 전년동월대비 증가
- 5월 기준 국내 수요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각각 전년동월대비 6.6%, 33.5% 증가하여, 지난 1월 이후 3개월 만에 전년동월비 증가로 전환
- 대리점 수요는 전년동월비 감소세를 보이거나 감소 폭은 이전에 비해 축소되고 있으며, 해외 수요는 꾸준히 전년동월비 증가세를 보이며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국내 수요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

[표 1] 국내 기계장비산업 수요자별 수주액 추이

(단위 : 억 원, %)

구분	'25.10	'25.11	'25.12	'26.01	'26.02	'26.03	'26.04	'26.05
총수주액 (증감률)	48,637 (-13.0)	62,287 (6.1)	71,293 (11.8)	68,316 (15.2)	59,828 (-21.8)	76,993 (4.2)	86,469 (26.6)	78,994 (25.8)
국내 (증감률)	22,277 (-17.1)	28,941 (9.8)	34,528 (8.5)	30,092 (7.8)	24,499 (-4.1)	33,792 (-7.2)	32,043 (-1.9)	35,345 (32.0)
대리점 (증감률)	2,917 (-54.5)	3,037 (-59.8)	3,208 (-44.5)	3,287 (-5.4)	3,239 (-25.2)	4,383 (-11.2)	4,299 (-9.2)	4,766 (-3.4)
해외 (증감률)	23,443 (3.5)	30,309 (22.3)	33,557 (28.3)	34,937 (25.2)	32,090 (-31.2)	38,818 (19.3)	50,127 (62.3)	38,883 (25.0)

* 자료 : 통계청, '기계수주동향조사'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로 표기

2 : 각 자료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3 : 2026년 3월 4일 기준, 지수 작성 방법에 따른 가중치 변경 및 연간보정 결과가 반영되어 일부 시계열이 변경

8) 2026년 6월 1일부터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수출 품목 분류체계인 MTI코드가 변경됨에 따라, 수출입 통계의 항목 구분 및 실적 수치가 전반적으로 수정됨.

○ **(전국)** 2026년 5월 기준 국내 기계장비 생산지수는 약한 회복 신호를 보이고 있으며, 6월 기준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이며 확대

- **(생산지수)** 2026년 5월 기준 전국 기계장비 생산지수는 전월대비 2.4% 감소, 전년동월대비 3.3% 증가
 - 5월 기계장비 생산지수는 지난 4월 대비 소폭 하락한 107.1로 3개월 연속 기준치(100) 이상의 실적을 기록하며, 월별지수에 다소 등락이 있으나 완만한 증가 추세
 - 다만 같은 기간 재고지수가 전월대비 0.5%, 전년동월대비 7.9% 증가하는 등 지난 2025년 12월부터 전년동월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에 주의할 필요
- **(품목별 수출액)** 2026년 6월 국내 기계장비 수출액은 전월대비 13.0%, 전년동월대비 12.3% 증가한 540.4천만 달러로⁹⁾, 기계장비 각 부문 수출액이 모두 전년동월비 증가
 - △정밀기계(30.1%) △기계부품(20.6%) △제조장비(9.2%) △산업기계(2.2%) △에너지기계(1.8%) 등 기계장비산업 전 부문의 수출액이 전년동월비 증가
 - 2026년 들어 제조장비, 산업기계, 에너지기계 부문의 수출액은 등락을 반복하며 보합 수준을 유지 중이나, 정밀기계 및 기계부품 부문의 수출액은 증가하는 추세

○ **(인천)** 인천의 2026년 5월 기계장비 생산지수는 101.7로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며, 6월 수출액은 연초대비 소폭 회복

- **(생산지수)** 2026년 5월 기준 기계장비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35.3% 감소, 전월대비 8.5% 증가한 101.7 수준으로, 2026년 들어 2025년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며 기준치(100) 근방에서 보합세
- **(품목별 수출액)** 6월 인천의 기계장비 총수출액은 전월대비 12.6% 증가, 전년동월대비 11.7% 감소한 약 45.7천만 달러로, 2026년 연초 급감했던 수출 실적이 다소 회복
 - 6월 인천 기계장비산업의 각 부문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은 △기계부품(29.8%) △정밀기계(22.2%) △제조장비(12.7%) △산업기계(-36.0%) △에너지기계(-52.2%) 순
 - 2026년 들어 산업기계 및 에너지기계 부문의 수출액은 급감하였으나, 정밀기계 및 기계부품 부문의 수출액은 전국 추세와 유사하게 증가세

[표 2] 국내 기계장비 산업생산지수 및 증감

지역	항목	'26.02	'26.03	'26.04 (p)	'26.05 (p)	'25.05	전월비 (%)	전년 동월비 (%)
전국	기계장치 제조업	88.1	114.9	109.7	107.1	103.7	-2.4	3.3
인천	기계장치 제조업	80.1	103.2	93.7	101.7	157.1	8.5	-3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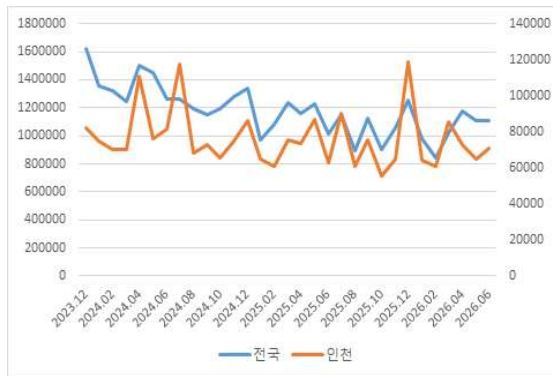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시도/산업별 광공업생산지수(2020=100)'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산업생산지수 파악에 활용한 항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구분하였으며,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의 자료를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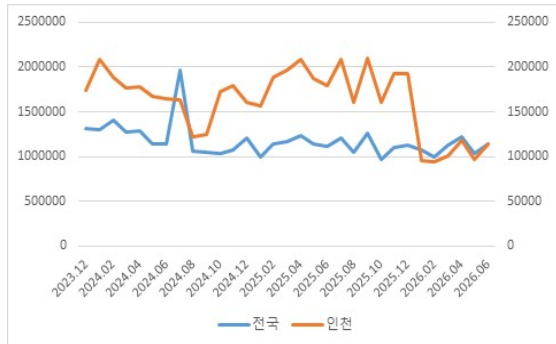
2 : 생산지수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하는 원지수를 이용하였으며,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 가능

3 : 2026년 3월 4일 기준, 지수 작성 방법에 따른 가중치 변경 및 연간보정 결과가 반영되어 일부 시계열이 변경

9) 기계장비 수출액은 제조장비(MTI71), 산업기계(MTI72), 정밀기계(MTI73), 에너지기계(MTI75), 기계부품(MTI76)의 수출액 합산 값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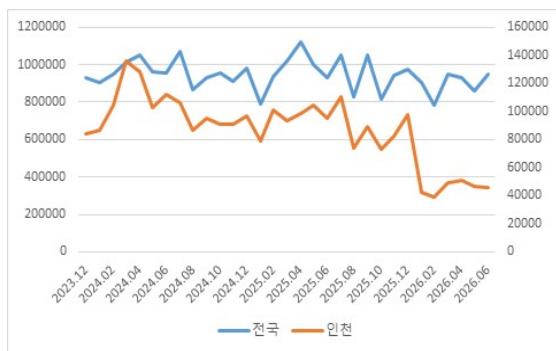
[제조장비(MTI71)]



[산업기계(MTI72)]



[정밀기계(MTI73)]



[에너지기계(MTI75)]



[기계부품(MTI76)]

* 자료 : K-stat 무역통계 '국내 품목 수출입 통계' 자료 참고 및 재구성

* 주 1: 수출 금액은 1,000\$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그래프 좌측은 전국 기준, 우측을 인천 기준으로 작성

2: 2026년 6월 1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수출 품목 분류체계인 MTI코드가 변경되어 수출입 통계의 항목 구분 및 실적 수치가 전반적으로 수정

[그림 1] 기계장비 품목별 수출 동향(2026.06)

[부록] 주요 산업 경기지표(2026.05 잠정)

제조업 생산지수	전국						인천					
	생산		출하		재고		생산		출하		재고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반도체	147.5	2.2	126.8	-2.5	109.7	5.3	135.3	0.4	136.2	3.5	299.8	17.2
자동차	123.3	-5.2	119.9	-6.0	138.7	1.5	124.1	-5.0	119.8	-1.6	96.5	-25.9
기계장비	107.1	3.3	105.5	0.8	138.1	7.9	101.7	-35.3	102.2	-27.8	132.0	-7.0
바이오-의약	154.7	0.5	160.5	7.2	-	-	307.7	8.2	248.6	41.1	-	-
바이오-화장품	87.4	-2.8	83.2	-11.8	100.3	-0.1	122.0	-5.9	103.6	-2.4	110.4	-4.0
건설 수주액 (억원, %)	전국						인천					
	공공		민간		공공		공공		민간		민간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건설	37,713	79.3	171,160	50.7	1,852	193.0	2,387	-59.9				

*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및 '건설경기동향조사'의 산업별 통계 참고 및 재구성

* 주 1 : 각 산업의 통계 원자료 참고 시 항목명은 순서대로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건설수주 등

2 : 생산지수는 2020년 기준 원지수를, 건설수주액은 종합건설업체의 건설수주액 경상가격을 이용해 작성되었으며, 각 지표의 증감은 전년동월대비 비율(%)로 표기

3 : 각 자료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4 : 2026년 3월 4일 기준, 지수 작성 방법에 따른 가중치 변경 및 연간보정 결과가 반영되어 일부 시계열이 변경

경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가 오는 8월 24일까지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사용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및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 가능

구분	주요 내용
관리비·사용료를 신고대상에 추가	• (현행) 임대차기간/임대료/대출 금액/임차인 현황 신고 → (개정) 관리비·사용료 금액 및 산정방식 포함 •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계약 시점부터 부과될 관리비·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 명확히 기재 • 임차인 및 임차인대표회회가 관리비·사용료에 대한 회계감사 요구 시 거절 불가
시·도의 민간임대주택 관리 권한 확대	•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 조례로 규정 가능 •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를 통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 열람 가능
임대조건 공고대상 확대 및 신고 누락 과태료 완화	• 신고된 임대 조건을 지방정부 공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도록 확대 •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 완화(1차: 500만 원→300만 원, 2차: 700만 원→500만 원)

금융

금융위, 취약차주 대상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상품 출시



#금융위원회

- 6월 29일부터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의 중·저신용자를 위한 금리 5~15%대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상품이 출시·판매
- 금번 대출 상품은 지난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4차 회의에서 발표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KB·OK·SBI·신한·예가람·한국투자저축은행 등 6개 금융회사가 자체 신용으로 공급
- 동 상품은 대출 취급 시점 기준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금리는 1차 출시기관 기준 최저 5.9%에서 최고 15.27% 수준에서 차주 신용도를 고려해 산출
 - 대출 한도는 차주별로 전 금융기관 합산 최대 1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 조회를 통해 차주별 동 대출 잔여 한도와 자체 산출 한도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최종 한도로 부여
 - 대출 시에는 1년 또는 대출 전액 상환 시까지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할 필요
-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은 각 금융회사별 모바일 앱(App), 전화,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토스, 카카오뱅크, 네이버페이, 핀다,뱅크샐러드 등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에서도 금리 비교 및 신청이 가능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혜택이 보다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재산심사를 강화하고, 채무조정 감면 기준 등을 개선할 예정
 -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소득·보유재산 등을 확인해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를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금번 제도 개선은 새출발기금 목적 등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재산심사 및 채무조정 체계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진행
 - 재산심사 시 신청인이 5대 가상자산거래소 및 홈택스를 통한 가상자산·비상장주식 보유 현황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기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조회된 소득 및 재산(부동산, 동산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던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누락 재산에 대한 사후검증을 수행
 - 채무자의 변제 능력에 따라 원금감면 수준이 기존보다 합리적으로 차등적용될 수 있도록 변제능력이 높은 채무자(변제가능률 100% 초과)의 최소감면율을 하향(60→30%)하고, 변제능력이 높은 수록 감면율이 낮아지도록 산정기준을 조정
 - 또한 새출발기금 채무자의 사해행위, 재산 허위신고 등에 조사·적발을 강화하여, 필요시 약정 해지 및 채무회수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난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의 피지컬AI 1강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피지컬 AI 핵심 경쟁력 확보 전략」을 발표
 - 동 로드맵은 2028년까지 피지컬AI를 수출하는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범용·분야별 특화 데이터 확보 △핵심기술 개발 △산업·공공 전분야 확산 △피지컬AI 성장 생태계 지원 등을 포함

구분	주요 내용
데이터	• 범부처 정부 사업 데이터 집적 및 종합관리 • 범용 데이터 획득·학습·실증 기반 구축 및 산업현장 특화 데이터 확보를 통한 AI 학습환경 제공
기술	• △피지컬AI 파운데이션 모델 △예측·시뮬레이션 지원 월드모델 △AI 반도체 기반 컴퓨팅 플랫폼 등 피지컬AI 3대 공통 기반기술 확보 • 장비·로봇 정밀제어, 로봇·기기 협업지능 등 핵심기술 실증을 통한 풀스택 AI 팩토리 구축 • 분야별 특화 피지컬AI 디바이스 개발·실증 및 휴머노이드 핵심기술 확보
확산	• 기술개발-데이터 구축·활용-실증상용화 쉼 주기에 걸친 범부처 정책·사업 간 연계 체계 구축 • △재난·안전 △국방 △돌봄 △농업 △모빌리티 △제조 등 공공·민간 핵심 분야 현장 적용·실증 추진
생태계	• 법·제도 기반 마련, 국민성장펀드 및 정책펀드 등 투자 지원, 표준·시험·인증 기준 마련, 산·학·연 협력 등 피지컬AI 산업 성장을 위한 전방위 기반 구축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부는 지난 6월 30일 발표된 유럽연합(EU)의 새 철강조치에 대응하여 철강업계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제도 안내 △선적·통관 대응 △현지애로 상담 △우회덤핑 우려 대응 등 전방위적 지원을 수행하는 통상애로 대응반을 가동
 - 기존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6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EU에 대한 국내 철강 무관세 쿼터가 기존 258만 톤에서 207.3만 톤으로 19.7% 감소
 - 주력 시장인 EU에 대한 철강재 수출 여건과 우리나라 기업이 구축한 현지 생산기지 공급망 영향, 기존 EU향 물량의 타 국가 시장 유입으로 인한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철강업계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
 - 간담회에서는 EU 신규 철강조치의 주요 내용과 더불어 철강 세부 품목 및 기업별 영향을 점검하고, 제도 시행 초기에 나타나는 애로 해소와 국내 철강업계의 공급망 재편을 위한 긴급 지원방안 등을 논의
 - 산업부는 철강협회·무역협회·KOTRA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제도 안내, 선적·통관 지원, 현지 애로 상담 등을 지원하는 통상애로 대응반을 가동
 - 또한 금번 EU의 시장 규제 강화가 철강업계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선·방산·재생 에너지 등 주요 전방산업과의 공급망 협력을 적극 뒷받침하고, 수입 철강재에 대한 조강국 정보 제출 제도화 및 보세공장 관리 제도 엄정 운영 등을 통해 우회덤핑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

#국토교통부

- 레벨4 자율주행 시대를 맞아 지난 7일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요건을 담은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을 마련
 - 금번 가이드라인에는 국내보다 먼저 레벨4 상용화를 달성한 해외의 허가요건을 참고하여 무인 자율주행차의 최소 주행실적 요건을 설정하였으며, MRC(위험완화상태)·이중화 등 최근 국제기구인 '유엔 유럽 경제위원회(UNECE)'에서 채택된 ADS(자율주행시스템) 국제기준의 용어 체계를 일부 반영

구분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주행 실적	• 15,000km 이상 주행기록 및 시험운전자의 제어권 전환 간격 160km당 1회 이하 만족
원격관제	• 비상시 대응을 위한 주행·교통상황 등 실시간 모니터링, 원격 관제센터-차량 간 양방향 통화 장치 구비
안전설계	• 자율주행시스템의 이중화, 탑승객의 비상정지 수단, 시스템과 별개인 비상제동 기능 등 의무화
MRC 전략	• 고장, 운행영역 이탈 등 사고 발생 시 원격 관제센터에 실시간 경고하고, 비상점멸표시등 작동과 함께 안전하게 정지할 필요
사고 대응	• 경로정보 제공 및 시스템의 운행 보조 등 원격지원 또는 긴급출동 체계를 통한 안전지대 이동 방안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이 「인공지능 일상화 시대를 준비하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
 - 동 로드맵은 안전하고 책임 있는 공급망 보안 체계의 전환을 통한 사이버 복원력 확보를 목표로 하여, 보안 역량 강화부터 기반 조성까지 소프트웨어 공급망 전반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
 - 우선 소프트웨어 공급망 위협의 완화를 위해 △공급망 보안 기준·가이드 개발 △기업 보안 수준 점검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SBOM)를 활용한 공급망 보안 관리 모델 확산 등 개발·공급 단계부터 보안을 내재화하고 소프트웨어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
 - 또한 기업의 연쇄 피해로 확산되는 특징을 가진 공급망 위협의 빠른 탐지·대응을 위해 △보안 취약점 신고제 △취약점 신고 포상제 △신고·조치·공개 제도 등 취약점 발굴 경로를 확대하는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 납품 정보통신제품의 안보위해 여부 검증 등을 통해 사고 발생 시 피해 확산을 최소화
 - 공개된 로드맵의 전문은 국가사이버보안센터(www.ncsc.go.kr) 및 한국인터넷진흥원(www.kisa.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대형 상용차 및 소형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 기준에 대한 지침·고시의 일부개정안을 발표하고 7월 15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 중
 - 금번 개정안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른 2030년 수송부문 목표배출량을 달성하기 위해 주요국의 규제 수준을 고려하여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 중·대형 상용차는 2030년까지 기준을 새로 정하고 소형차는 현행 2030년까지의 기준을 일부 조정
 - 중·대형차는 2027년부터 차종에 따라 3단계*에 걸쳐 감축을 의무화하여 2030년까지 '21~'22년 평균 온실가스 대시 30% 감축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 미충족 시 과징금을 부과
 - * (1단계) 총중량 15톤 이상 대형 화물, 트랙터→(2단계) 중·대형 승합→(3단계) 총중량 15톤 미만 중형화물, 덤프
 - ①승용차, 10인승 이하 승합차와 ②소형화물차, 11~15인승 승합차에 해당하는 소형차는 평균 온실가스 기준이 매년 점차 강화되어 ①70g/km(현행)→53g/km('30년) ②146g/km→98g/km로 조정
 - 또한 소형차의 경우 강화되는 기준에 맞춰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등에 부여하는 판매실적 추가 혜택을 '29년까지 연장하고, 자동차 제작사의 판매규모별 규제 이행능력을 고려해 제작사 구분을 4단계로 세분화하는 등 이행 기반을 현실화

참고 자료

- 산업통상부, “5극3특 성장엔진 청사진, 그린다”, 2026.06.10.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www.balance.go.kr.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舊. 국가균형발전위원회·지역발전위원회), “5+2 광역경제권별 발전 비전과 선도산업·인력·인프라 구축방안 제시”, 2008.09.09.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舊. 국가균형발전위원회·지역발전위원회),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2018.02.
- 관계부처합동,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2025.08.22.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요약)」, 2025.09.30.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5극3특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 공동기획단 워크숍」, 2026.07.02.
- 뉴시스, ““5극3특 맞춤형”…중진공, ‘종합평가지표’ 만든다”, 2026.07.07.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5극3특 중심 지역산업 생태계 도약 돕는다”, 2026.02.11.
- 한국은행 총복본부, “주요국의 메가시티 조성 사례 및 시사점”, 2025.05.23.
- 국토연구원,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주도 초광역권 육성 전략」, 2022.03.31.
- 국가통계포털(KOSIS), ‘기계수주동향조사’.
-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및 ‘건설경기동향조사’.
- K-stat 무역통계, ‘국내 품목별 수출입 통계’ 및 ‘국내 지역별 수출입 통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임대차계약 신고 때 관리비·사용료도 포함…임대료 편법 인상 방지”, 국토교통부, 2026.07.1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취약차주 위한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상품 출시…금리 5.9~15.27%”, 금융위원회, 2026.06.2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새출발기금 재산심사 강화…가상자산·비상장주식 등도 면밀히 확인”, 금융위원회, 2026.06.2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피지컬 AI 1강’ 청사진 나왔다…핵심 경쟁력 확보 전략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07.0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U 철광 쿼터 축소 조치 대응…산업장관 “국내 수요 창출 전폭 지원””, 산업통상부, 2026.07.0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레벨4 자율주행 시대 가속…안전운행 가이드라인 마련”, 국토교통부, 2026.07.0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AI 기반 공격 막는다…‘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로드맵’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06.2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중·대형차, 내년부터 3단계 걸쳐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 적용”,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7.14.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6-07호(2026.07.27)

발 행 처 인천연구원
발 행 일 2026년 07월 27일
주 소 (227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전 화 032-260-2600
홈페이지 www.ii.re.kr

본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인천연구원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